

전북, '바이오 경제 2.0' 시대 연다

소부장·디지털 헬스케어·첨단재생의료 집중 육성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바이오 경제 2.0' 실현에 본격 착수한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사진)은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5년도 레드바이오 산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바이오 소부장,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를 3대 핵심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고품화에 따른 항노화 바이오 분야를 핵심 타깃으로 암, 당뇨, 치매, 퇴행성 질환 등에 대응 가능한 첨단 바이오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2029년까지 바이오 기업 150개사 유치, 5개 상장기업 육성, 연 1,000명의 인력 양성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했다.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메카노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중재 의료기기와 생체 계측기



치료기술 등 첨단 의료기기 개발이 중점 추진된다. 전북대는 관련 연구센터를 통해 26종의 평가 장비를 구축했고, 현재는 실증센터

를 통해 22종의 장비를 추가 확보하며 기술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최고 수준의 탄소소재 산업과의 융합도 본격화된다.

도는 이미 탄소소재 기반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장비 36종을 구축했으며, 오는 2028년까지 원스톱 제품화 지원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서비스 개발이 핵심이다.

전북대병원은 근골격계 질환 진단 플랫폼, 원광대는 근감소증 조기 진단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 공모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 인큐베이터'는 신생아 원격 진료를 가능케 하는 기술로,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첨단재생의료 분야는 관련법 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도는 조직공학 중심의 세포·유전자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정밀모니터링 바이오 프린팅' 사업에 350억원 국가 예산에 반영 추진 중이다. 아울러 규제 완화 특례를 활용해 중증도 낮은 질환에 대한 임상 실증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바이오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레드 바이오 펀드(1,284억원)를 조성하고, 맞춤형 R&D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유도한다.

올해만 해도 2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 메이요 클리닉, 하버드의대 협력병원 등과의 MOU를 통해 글로벌 공동연구 기반을 마련했으며, 독일 KIST 유럽연구소와도 연계해 유럽

시장 진출도 본격화한다. 도내 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거점인 보스턴 CIC센터도 확보했다.

인력 양성 분야에서는 전북대와 원광대 중심으로 의사 과학자, 실무 인력 배출이 이뤄지며, 2026년부터는 제약 공직 교육을 위한 전문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인프라 확충 역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기업 지원 시설 및 실험실 등 바이오 기업 집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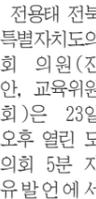
신원식 국장은 "3대 핵심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바이오산업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여, 전북의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기업지원 사업 발굴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의 소부장,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 의료 산업 등의 집중 육성으로 인해 그간 1차와 2차 산업 등 다소 뒤쳐져 있던 전북 산업의 지평이 최첨단 고도화 산업으로 전환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희생 위에 세워진 용담댐 댐 수익 지역 환원 나서야”

전용태 도의원, 도 차원 지원 필요성 강조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진안, 교육위원회)은 23일 오후 열린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용담댐은 진안 주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전북도는 이제라도 댐 수익의 지역 환원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12일 진안에서 열린 제1회 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행사를 언급하며, “고향을 떠나야 했던 수물민들의 삶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라고 강조했다.

용담댐은 1990년 착공해 2001년 완공된 다목적댐으로, 진안군 6개 읍·면 953만명이 수물됐고 2,860가구, 1만2,600여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전 의원은 “일제강점기부터 반복된 수물 위기와 재산권 제한 속에서도 진안 주민들은 조용히 헌신

해왔다”며 “그럼에도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 각종 규제 등 현실적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에 따른 보상 기준이 시대변화에 뒤처졌다는 점도 짚었다. 용수관내 수익의 22%만이 지역에 환원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소양강댐 수익 30% 환원 논의와 비교해 전북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재추진 중인 ‘용담댐 수상태양광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진안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님에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1급수 수질을 관리해 왔다”며 “주민참여형이라 하지만, 실질적 수익은 쪼리리만큼”이라며 도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용담댐 수익이 정당하게 지역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확실히”

혁신당 전북도당, 민주당

호남경선에 정책연대 촉구

“전북 위한 정권교체 최선”

전북의 미래가 달린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동상) 박성수 정책실장은 23일 논평을 통해 “오는 26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이 전북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확실하게 받아내는 경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른 상황에서, 호남 경선이 단순한 절차를 넘는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은 단지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 지역 발전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회”라며 “전북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이 준비한 이번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다른 지역이 AI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북은 ‘농생명 AI 전환 허브’ 등 소규모 계획에 머무르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박 실장은 “AI 산업은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이며, 전북은 탄소중립 에너지 기반을 AI 산업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또다시 발전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약이 전북도청의 제안에 그친 점도 비판했다. “정치가 행정을 복사하는 수준에 머무르면 지역 발전 전략은 멈춘다”며 “도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행력 있는 공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호남 지역의 낮은 투표율도 문제로 꼽았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호남 투표율이 40%대로 떨어진 것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라며 “이번 경선에서 높은 투표율로 전북의 존재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우리 당의 후보라 생각하고 함께 하겠다”며 공동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전북도당도 “민주당과 함께 전북을 위한 정권교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 실리외교 본격 시동

7개국 외교관 전주 방문

실리외교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관광·교육·경제를 아우르는 실질 외교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협력 의연을 넓히고 있다.

도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라오스,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파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등 7개국 외교관 14명을 초청해, 지역 문화·교육·경제 역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북형 실리외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첫날에는 전주시와 협력한 전주한옥마을 및 경기전 투어를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를 소개했다. 전주시 관광마케팅팀이 직접 나서 경기전 여행가 라운지에서 한옥마을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했고, 이어 한국전통문화재단에서는 한지 공예 및 전주비빔밥 만들기 체험으로 전북의 감성과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전통문화연구원에서의 의관정제(衣冠正制)와 전통 다과상 체험을 통해 한국 전통예절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이후 전북대학교를 방문하여 양양봉 총장과 면담을 가지고 유학생 유치 정책과 글로벌 캠퍼스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도내 수출기업과 함께하는 ‘해외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외교관은 자국의 수입 동향과 시장 진출 전략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라오스,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파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등 7개국 외교관 14명을 초청해, 지역 문화·교육·경제 역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북형 실리외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직접 발표하고, 정식케미칼, 라라스팜, 효성첨단소재 등 40여 개 참가 기업들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경제 교류 가능성을 타진했다. 또한, 도는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도내 기업에 취업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국인 정착지원 정책도 소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관광, 교육, 경제 분야에서 외교 협력의 기반을 넓혔으며, 지역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외교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시, 전북대, 경제통상진흥원 등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이 효과적인 지역 경쟁력 확보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만호 기자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승인 절차 중단하라”

오은미 도의원, 결의안 대표발의... GMO 완전 표시제 시행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2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전자변형(LMO) 감자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유전자변형 감자(SPS-Y9)에 대해 작물재배환경위해성 협의심사 후 ‘적합’ 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지난 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위해성 심사만 남겨놓은 상태로 국내에 식품용 유전자변형 감자가 들어오는 것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유전자변형 감자는 미국의 감자 생산업체인 심플릿사가 2018년 4월에 수입 승인을 신청한 감자로 당시 농민들과 국민의 반대, 국내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로 수입이 무산된 바 있다.



오 의원은 “7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촌진흥청이 미국의 유전자변형 감자가 국민 식탁에 올라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국내에 수입될 순간만 기다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재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유전자변형 감자는 식품용 감자로 최종 승인된다면 감자튀김 등 가공된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돼 국민 식탁의 안전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전자변형 감자가 수입되는 만큼 국내 감자재배 농민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식량주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2년 기준 국내 곡물자급률은 22.3% 그나마 감자를 포함한 서류가 93.4%에 이르는 자급률을 달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미국산 감자가 수입된다면 자급률 20% 마지노선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오 의원은 “국민 건강권, 농업 주권, 식량안보를 위한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의 길을 열어준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유전자변형 감자의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GMO 완전 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오은미 의원은 “지금 농촌은 햇감자 수확이 한창인데,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도 잠시,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가 수입될 수 있다는 소식이 생존권 위협을 느끼며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 제1일반산단 내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임승식 도의원, 5분 발언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승식 의원(정읍 1·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읍시 제1일반산업단지 내 화력발전소(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폐목재를 활용한 목질계가 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인정되는 순간부터 논란이 돼왔다. 나무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친환경 문제 제기부터 목재연소시 나오는 각종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런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한국남부발전이 전북 정읍시 제1일반산단에 1,814억원을 투자해 22MW급 바이오매스발전소를 짓는 것이다. 사업비용 조달구조는 정읍그린파워의 자기자본 10%와 PF대출 90%의 대출로 구성돼 있고, 자기자본 10% 중에서 최대지분인 45%를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실제 한국남부발전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읍그린파워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했고 남부발전에 재직했던 인사가 현재 대표이사로, 정읍그린파워가 명목상 사업주체일 뿐 실체는 한국남부발전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이다.

임승식 의원은 “국가 공기업이 사업 주체라면, 사업추진의 적법성과 공공성, 투명성 확보는 당연지사”라며 “하지만 다수의 정읍 시민께서는 화력발전소 건설 소식을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알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체는 지난 2020년 2월 공장 부지 매입후 사업추진을 위해 산단개



발계획 변경을 요청했고, 당시 전북도는 ‘타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협의조건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업체는 ‘지역 대책위원회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 대하여 협약서를 작성했고 지역주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조치계획을 제출했고, 전북도는 이를 근거로 2020년 7월 24일 승인한 것이다.

하지만 임승식 의원은 “당시 업체가 제출한 추진계획에는 2018년 4월 19일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업추진 협약체결을 완료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본 합의는 2019년 7월 16일 상호 합의에 파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는 이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주민협의체와 합의 파기된 지 불과 3일 후 ‘정읍 목재발전소 대책위원회’라는 회의가 몇 명인지도 알 수 없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명목상 이들과의 합의가 마치 주민수용성이 완료된 것으로 제출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은 주민수용성을 의문하고 나아가 왜곡한 채 진행됐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라며 “전북자치도는 이제라도 원점 재검토에 나서야 하며, 한국남부발전은 즉각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정읍시민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독일 디아코니아와 복지 협력 물꼬 터

도의회 농복환위, 2024년 국외연수 실질적 결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지난 22일 독일 복지기관 디아코니아(Diakonie) 바덴 지부의 관계자들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 독일 국외연수 당시 이뤄진 교류의 성과로, 정책 탐방이 실제 국제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회의를 찾은 디아코니아 바덴 지부의 Robert Bachert 대표를 비롯한 5명의 방문단은 도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의정활동 현장을 둘러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복지 정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제도 운영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복지 분야 공동 과제 발굴, 실무자 상호 연수 프로그램 추진, 정책 세미나 공동 개최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